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野 '말로만 입법'에 정치 등돌린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등 5개 대표법안 네ট공방에 법안통과 '지지부진' 소공연 "중기부 기본법안 미흡"

정치권이 올해 초·중순에 이어 또다시 소상공인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하지만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전히 계류하고 있어 정부·국회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회부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5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흥의원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을, 자유한국당은 홍철호 의원이 낸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의 개념 규정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시책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난 1월 흥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각자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직능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회에서 "기본법을 열심히 추진했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법안 처리는 연말인 11월까지 미뤄졌지만, 여야는 '네 텁'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청년·소상공인 등 시민대표를 국회에 초청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됐다"며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뿐 아니라 경제 기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경제·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현 정부의 좌파경제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설전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소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보다 현격히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사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을 문제로 짚었다.

흥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도 문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에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지만, 자영업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함한다.

같은 날 야당은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청 토론회를 열었지만, 되려 "정책 감수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뜻매를 맞았다.

한 참석자는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태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잡고, 정권 탈환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픈뱅킹 착오송금 늘텐데… 고객보호 뒷전

내달 '오픈뱅킹 서비스' 본격 시행  
착오송금 74% 인터넷·모바일 발생  
수취인 거절땐 돌려받을 가능성 ↓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체 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안점검을 마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더 쉽고 빠른 앱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부터 이체까지의 과정이 쉬워짐에 따라 이용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모바일 앱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실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착오송금 사례 중 74%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발생했다. 특히 착오송금이라는 인터넷 모바일 이체가 본격화된 2017년 2385건을 기록해 2014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 건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착오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송금자는 이체를 시행한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절할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 예보법상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착오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피해 시 예금보험공사는 송

금인에게 제반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기 운영되는 400억~700억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금융위와 예보의 정부 예산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착오송금을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금인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회수율은 44% 수준이다. 예컨대 착오송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66억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정부에 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만으로 초기 재원을 감당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예산외에도 착오송금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韓, 세계 선박수주 2년연속 1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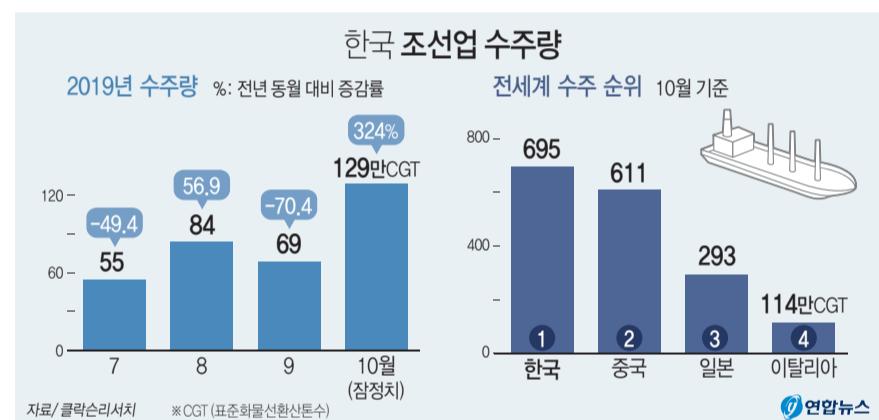
초대형 컨테이너 등 86% 달해  
총 17척 수주… 中 10% 불과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 10대 중 8대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면서 수주액과 수주물량에서 모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12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50만CGT(38척) 중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위주로 86%(129만CGT, 17척)를 수주했다. 그 중 10%는 중국(15만CGT, 8척)이 차지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4척, 초대형 유수운반선(VLCC) 1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 등 고부가 가치 선종을 전량 수주했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도 1척 수주했다.

10월까지 누적 수주량에서도 한국



은 695만CGT(39%)를 기록해 611만CGT인 중국(35%)을 추월하고 1위를 탈환했다.

누계 수주액을 보면 한국이 159억 7000만 달러로, 13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수주하지 못한 LNG운반선, VLCC, 초대형컨테이너선은 대부

분 중국, 일본 등의 자국 발주 물량이었다.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는 북극 LNG-2와 카타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의 LNG 프로젝트 물량이 발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 기사에 '중간광고' 도입… 언론사가 영업권 가져온다

네이버 '미디어 커넥트데이'  
뉴스서비스 개편, 신규 툴 공개  
"언론사-네이버 상생방안 마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019 미디어 커넥트데이'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네이버가 언론사에 지급하던 콘텐츠 사용료(전재료) 모델에서 광고 수익 전액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모델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 기사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며 언론사는 전체 광고에 대한 영업권을 직접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12일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운영 방향성을 공개하는 '2019 미디어 커넥트데이'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뉴스 서비스 개편 성과와 함께 언론사 구독 기반의 새로운 뉴스 통합관리시

일 네이버의 '언론사 흡'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에 더해,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전액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 본문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중간광고 추가와 함께 언론사가 전체 광고에 대한 영업권을 갖게 됨에 따라 언론사의 수익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익 모델은 변화하지만 언론사는 3년간 수익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이버는 실제 운영 이후, 언론사의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 대비 줄어들 경우 향후 3년간 별도 재원을 통해 기존 수준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 운영총괄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적용되면 수익이 느는 언론사도 있고 줄어드는 언론사도 있겠지만, 앞으로 3년간 수익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